




		<div>보도반박</div>				
						
보도		배포 후 즉시		배포	'21.10.4.(월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	
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권 유 이(02-2100-2510)				이 용 준 사무관 (02-2100-2523)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		김 형 원 팀장 (02-3145-8040)	

제 목 :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하고
있지 않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☐ 매일경제는 10.4일자 “전세보증금 오른만큼만 대출”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앞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”
 - “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·관리하고 있으며,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.
 - 이와 관련하여, ‘전세보증금 증액 범위내 대출’ 등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.
- ☐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으며, 앞으로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